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jhjung@kiep.go.kr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shlee@kiep.go.kr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ojh@kiep.go.kr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leehn@kiep.go.kr

노수연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syno_korea@korea.ac.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정책을 통해 중국 혁신역량의 양적 지표는 급속히 성장하여 중등소득국가 중 최고 반열에 올랐으나 질적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
 - IMD(국가경영개발연구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R&D 투자는 2016년 1.5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창업기업 수, 과학기술 투자증가율은 세계 1위, 연구인력규모, 특허 수, 논문 수 등도 세계 상위권 수준
 - WIPO의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결과, 중등소득국가 중 처음으로 22위권에 진입
 -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국가혁신지수 평가결과, 2000년 세계 38위에서 2014년 18위로 지속 상승
 - 그러나 R&D/GDP(2.1%), 연구인력/고용인원, 삼극특허 비중, 논문 피인용 횟수 등 질적 지표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IMD, WIPO)
 - 이밖에 혁신 관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노동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시장환경, 경쟁환경의 공정성, 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은 미흡
-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은 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아 최근 전방위적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을 전면화
 -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2000년대 중반~)과 함께 최근 혁신의 대상을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혁신의 융합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음.
 -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산업화 전환 및 경제발전으로의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발전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단계별 목표와 분야별 세부 정책을 추진
 - 2020년 혁신국가 대열 진입, 2030년 혁신국가 대열의 선두로 도약하여 경제강국 초석 마련, 2050년 세계 과학기술 혁신 강국 달성을 추구
 - 전방위적 혁신발전을 위하여 산업혁신(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 우수인재육성(과학기술·산업기능·첨단혁신인재 등), 창업활성화(일반대중의 혁신 및 강소기업 지원 등), 제도·행정 개선(혁신 장려시스템, 법률제도) 등 세부 정책 강화
- 또한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에 중국 각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각 지역은 국가혁신전략에 맞는 지역별 목표와 세부 정책을 추진

-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은 원천혁신과 혁신역량 집적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 구축
 - 중서부 내륙지역은 차별화와 비약적 발전방식을 통해 선진기술을 보급·응용하여 특화된 경제와 신산업 육성
- 한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해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질적 성장의 원천인 혁신발전전략에 대한 이해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혁신발전수준, 정부 적극성 및 정책의지, 경제적 위상, 로컬기업의 비교우위 등이 상이한 지역별 혁신전략의 특징 파악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 분야 선별, 정책 지원 등이 필요
-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인 혁신분야의 협력 가능성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안
 - 협력지역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비교
 -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지역별 혁신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 분석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

-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을 통해 산출한 결과, 압도적 1위인 베이징에 이어 텐진,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
 - 세부 통계지표를 혁신인프라, 혁신투입, 혁신산출의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점수를 표준화하여 지역별로 합산한 혁신역량 종합점수 산출
-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텐진,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

표 1. 중국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2011년 및 2014년)

2011년		2014년	
1군(5)	베이징(40.2), 상하이(18.0), 톈진(15.0), 장쑤(11.0), 광둥(10.9)	1군(6)	베이징(46.6), 톈진(25.4), 상하이(22.5), 장쑤(13.2), 저장(12.6), 광둥(11.6)
2군(8)	푸젠(3.7), 랴오닝(3.5), 저장(2.9), 하이난(2.9), 산둥(2.6), 충칭(2.3), 후베이(2.0), 산시(陝西, 2.0)	2군(5)	산둥(4.5), 충칭(4.2), 후베이(1.4), 쓰촨(0.6), 푸젠(0.0)
3군(8)	쓰촨(-1.1), 후난(-1.8), 장시(-2.1), 헤이룽장(-4.3), 지린(-4.4), 안후이(-4.6), 티벳(-4.6), 구이저우(-4.8)	3군(7)	산시(陝西, -2.5), 후난(-2.9), 랴오닝(-3.4), 헤이룽장(-3.5), 안후이(-3.8), 허난(-4.7), 간쑤(-5.0)
4군(10)	허난(-6.3), 네이멍구(-7.0), 간쑤(-7.5), 칭하이(-7.8), 허베이(-8.0), 광시(-8.4), 산시(山西, -8.9), 닝샤(-9.9), 윈난(-10.3), 신장(-15.2)	4군(13)	광시(-6.0), 지린(-6.8), 하이난(-7.0), 산시(山西, -7.1), 구이저우(-8.9), 칭하이(-9.1), 장시(-9.2), 닝샤(-9.3), 티벳(-10.2), 네이멍구(-10.2), 윈난(-10.2), 허베이(-10.3), 신장(-12.5)

주: 1) 값은 [표 1]에서 제시한 24개 변수의 표준화점수(Z 점수)의 합계로 계산함.

2) 군집별 () 안의 값은 해당 군집의 개체 수이고, 지역별 () 안의 값은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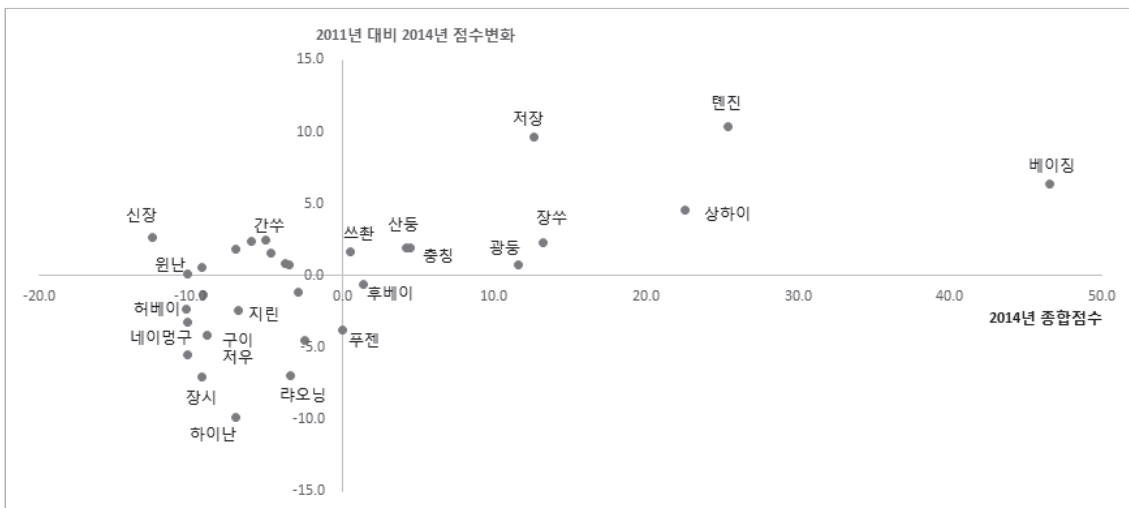
3) 1군은 합계가 10 이상, 2군은 0 이상, 3군은 -5 이상, 4군은 -5 이하로 구분함.

자료: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http://www.sts.org.cn/zhb/>(검색일: 2016. 8. 24); CEIC DB(검색일: 2016. 8. 24); 国家统计局, 科技部(2012); 国家统计局, 科技部(2015)의 값을 활용하여 저자 계산.

●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한 결과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고 향상속도도 빠름.

-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의 혁신역량 수준은 낮으나 성장속도가 빠르게 상승

그림 1. 중국의 혁신역량 및 혁신속도의 지역별 분포(2014년)



주: 가로축은 2014년 종합점수, 세로축은 2011년 대비 2014년의 점수 변화를 나타냄.

자료: [표 1]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 및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

2)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 혁신발전의 중요한 환경요소인 정책은 총괄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분석
 - 지역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업 혁신정책, 인터넷융합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목표, 중점 혁신분야 및 프로젝트, 지역특화사업, 정책지원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
- 주요 지역의 혁신역량 점수와 혁신정책 우수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네 가지 혁신유형으로 분류
 - 정책 우수성은 전략목표와 중점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 세부 추진방안, 재정·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 4개 영역으로 평가
- 현재의 혁신역량 수준이 높으면서 정책이 우수하여 혁신발전의 심화가 전망되는 지역은 베이징, 장쑤, 저장
 - 특히 베이징은 혁신 역량과 정책 우수성 모두 월등히 높아 중국의 혁신발전을 선도
- 한편 현재의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과 산시는 혁신 유망지역
 - 혁신 역량과 정책 우수성 모두 낮은 지역은 혁신열위지역으로 분류

표 2. 혁신유형별 지역혁신정책 특징

유형	지역	중점육성기술	역점 혁신분야	재정·금융 지원
혁신선도	베이징	기초 및 첨단	인터넷융합: 과학기술서비스	정부구매, 보조금, 펀드
혁신심화	장쑤	산업화	제조: 집적회로, 통신·교통장비	보조금, 대출·보험
	저장	응용	인터넷융합: SW, 인터넷서비스	특별기금, 보조금
혁신유망	충칭	산업화	제조: 집적회로, 로봇, 교통설비	세금공제·보조금, 정부구매, 펀드
	산시	기초 및 산업	제조: 에너지, 장비, 농업, ICT	보조금, 보증, 정부구매, 펀드
혁신열위	푸젠	기초 및 산업	제조: 정보전자, 장비, 에너지	보조금
	안후이	기초 및 산업	제조: 디스플레이, 에너지	보조금, 신용대출
	랴오닝	산업화	제조: 장비(로봇), 정보통신, 농업	보조금
	광시	기초 및 산업	제조: 농업, IT, 신소재, 장비	보조금

자료: 저자 분석

3)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분석
 -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요인은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의 물적 인프라를 분석하여 파악
 - 정부,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중 혁신추동주체 및 지역별 혁신주체 역량 강화 노력 등에 대해 분석
 -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이의 개선방법 분석
- 혁신 선도지역인 베이징은 우수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
 -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 개방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수 국가와 협력채널 구축
 -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 센터 설립 지원 활발
-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장쑤는 응용기술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
 -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지식재산권 강조
 -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 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장려
- 혁신 유망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면서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
 -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

4)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 베이징: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
 - 우수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 등 풍부한 혁신자원과 중관춘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혁신·창업 환경을 토대로, 지식 및 기초연구에 대한 혁신 비중이 높으나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가 저조하여 징진지 혁신공동체를 통해 허베이·텐진으로의 산업화 공간을 확대할 계획
 - 3차산업(75%) 중심의 베이징은 자체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혁신수요 증대로 과학기술혁신

발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4년 국가급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 허가

- 혁신주체로의 기업역량 강화, 최근 쉐샹, 바이두 등 첨단기술기업 2만여 개가 중관춘 시범구에 집적하여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제조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해 성공적인 선도기업 육성, 혁신표준 제정 등 산업 내 영향력을 제고할 계획

● **장쑤성: 2035년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원천 혁신보다는 산업화 혁신에 집중하여 기반산업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추진**

- 풍부한 혁신자원과 기술, 우수한 산업기반과 기업역량을 토대로 혁신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저위 부가가치분야에 집중된 산업구조와 첨단기술분야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극복하고자 국제적인 혁신협력과 기술성과의 산업화 전환 강화
- 중대형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자체 R&D 센터 설립 비중이 88%일 정도로 혁신주체로서 기업의 역량이 강하며, 이를 더욱 촉진하고자 기업연구소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및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을 추진
- 중국 최대 혁신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강조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적

● **저장성: 민영기업의 적극성과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 민영경제 중심으로 성장해온 저장성은 민영기업이 혁신의 핵심주체이자 경제성장동력
- 혁신 자원과 인구는 적으나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융합 및 IT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이 중요한 혁신분야

● **충칭: 서부 대표 공업도시로, 혁신역량은 비교적 낮지만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서부지역의 혁신 중심지 추구**

- 우수한 혁신인재장려정책을 비롯하여 인터넷학원을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산업 유관인재를 적극 육성
- 과학기술 기업과 창업에 대한 보조금 및 펀드 조성 등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여 충칭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역량 강화 추진
- 특히 량장신구에 새롭게 육성 중인 인터넷산업원은 인터넷기업에 최적의 인프라와 다양한 기금운용을 통한 기업금융을 제공

- **산시:** 2050년 일대일로 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공급 측 개혁 촉진

- 기업보다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혁신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부한 혁신자원을 기반으로 기초연구나 특허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 창출, 그러나 연구성과의 산업화는 매우 취약
- 시안시 중심으로 통신·전자 분야에서 R&D 연구역량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주로 군 혹은 연구기관, 대학 등에 기반이 집중되어 기업의 경쟁력은 약한 편
- 중간재 중심의 생산구조, 최종재 생산기업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응용기술화 및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체적 한계 보유

- **안후이:** 풍부한 과학기술자원을 토대로 정보통신, 에너지, 헬스케어, 환경 분야의 기술 선도 및 산업화를 통해 과학중심지 구축 추진

-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81% 정도로 높으며, 연구성과가 상품개발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플랫폼을 조성하여 연구인력과 기업 간 협력을 장려, 이를 통해 기술산업화와 응용기술 발전 추진
- 창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 투융자에 필요한 금융서비스의 발전수준이 낮고 기술의 시장화와 상업화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연해지역보다 낮아 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3. 정책 제언

1)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① 혁신 선도지역: 베이징

- **혁신발전분야에서 중국 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징과의 협력 강화 필요**

- 우수한 혁신자원 및 발달한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연구협력 강화, 특히 한·중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등 분야 중심
- 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 및 상업화 분야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 내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의 응용 및 사업화 추진 필요, 중국의 기술사업화 추진단위 및 기술이전 센터와의 협력 활용
- 양국의 첨단기술 보유 연구기간의 상호 유치나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이밖에 바이오의약분야의 다국적기업 근무경험이 있는 중국 인재가 집중되어 바이오벤처 창업 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인재 활용 및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과 시장개척의 기회로 활용

② 혁신 심화지역

● 장쑤성: 국제협력과 기술성과의 산업화 추진정책을 활용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육성되는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 추진 강화

- 향후 유망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스마트 제조,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을 제시, 2020년까지 미래형 네트워크, 통신, 전략적 신소재, 신의약, 스마트 제조 등 기술분야에 600개 이상의 중점 연구개발계획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
- 한국과는 장비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의 중고위 기술분야, 자동차, 화공, 전자 산업에서 기술협력 수요 예상
- 최근 반도체, 신형 디스플레이, 공정기계 등의 산업클러스터를 중점육성하면서 기술추격과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저장성: 서비스업 및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유망분야 발굴 필요

- 공업용 로봇, 스마트 웨어러블 설비, 산업자동차 제어시스템 등 로봇과 스마트 제조 장비를 중점 발전시킬 계획으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수요 증대 전망
- 외자 연구기관의 저장성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참여 독려, 외국인의 투자분야 확대,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 시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적용 등 외자기관의 진출을 적극 지원

③ 혁신 유망지역

● 충칭시: 하이테크산업 및 전략적 신산업 등 혁신형 경제로의 자체적 전환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수요 발굴

- 경제 전환을 위해 혁신인재장려정책 시행, 인터넷학원 설립을 통한 인터넷산업분야 인재 육성 추진
- 충칭시 첨단기술산업단지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인텔과 추진, 향후 한국은 IT 산업, 스마트 제조,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 등 해당 산업단지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서 지분 참여나 인재교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 기술교류 등을 통해 진출 모색

● 산시성: 양국 정부간 기구축채널을 통한 협력대화를 추진하여 공동 연구와 사업화 기회 모색과 함께, 국내 기업 및 연구소와의 매칭 추진도 필요

- 정보교류채널 확대 위해 산업별 협회간 협력체계 구축 고려 가능, 현지의 KOTRA와 중소기업청 등을 활용해 연계 사업화하는 방안 모색
- 산시성 중점육성분야인 신산업 관련 협력에 집중하면서도 바이오기술·자원 협력, 친환경 농업 연구단지 조성, 에너지 분야 후방산업 협력확대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추진 필요

- 또한 양국 관심분야인 환경분야에서 현지 기관과의 협력채널 확대를 통해 협력사업 추진분야 지속 발굴 필요

2) 정부의 대응방안

● 양국 정부간 협력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사례 개발

- 혁신분야의 기존 협력플랫폼(한·중 기업협력혁신센터,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등)을 기반으로 B2G2B 모델 활용 및 확산
- 기술혁신분야의 협력은 한·중 기업 간 직접 협력의 성공가능성이 낮으므로 정부유관기관이 중심점이 되는 B2G2B 모델을 활용하여 기술무역장벽(TBT), 인증 관련 진출 제약 해소 필요
- 사례: 상하이 정책 수요에 필요한 로봇 기술·제품(노인케어, 안내, 교육보조) 관련 공동 R&D 센터 설립 후 양국 기업 참여
- 한국에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화기술 및 환경기술 등을 중심으로 응용기술실용화센터 등을 운영하여 우리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기회 확대 필요
-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필수적인 협력수요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의 혁신 심화·유망 지역으로 협력플랫폼 확대, 이 지역들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분야, 기술, 사업화 관련 협력기회 발굴 및 적합 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주축이 되는 한·중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안)를 구축하여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한·중 간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협력채널 다원화, 성과공유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 중국의 주요 혁신단지, 분야별 시범기지 등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협력기회 발굴: 베이징 중관춘 혁신단지, 광둥 선전 미래 혁신산업기지, 충칭 IoT 시범기지, 저장 항저우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등
- 기술·혁신 분야 협력의 실질적 진전과 혁신협력의 명확한 동기부여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양국 정부간 상호 원인의 명확한 인센티브 분배방식 관련 논의 필요
- 저장성 등 지식재산권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및 상호 합의 필요

● 정부 주도 혁신모델에 대한 검토

- 일부 지역 및 분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혁신정책을 마중물로 하여 기업 주도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13.5 계획 기간 이후 혁신의 대상 및 범위를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에서 산업, 제도, 경영,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전방위적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산업

과 경제, 사회 발전으로 확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제약요인을 개선

- 한편 한국은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 주도의 혁신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의 필요성이 급부상한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수출 및 내수 모두 불투명하고 기업간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격차의 확대 등이 지속
- 이에 한국은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혁신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의 혁신전략을 중·단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매개로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적 혁신발전이 가능하도록 동력을 제공할 필요

● 산업, 기업, 창업, 제도 등 측면의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 한·중 간 제조업 분야의 중점육성산업이 유사하고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산업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산업경쟁력 강화 시급
-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기반인 기술개발과 R&D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창업자금 조달여건 개선 필요
-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제약요인인 마케팅 관련 지원 강화, 진출 지역 및 분야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
- 기존 법·제도에 의해 발전이 제약되는 신규 혁신분야(신기술 개발·응용·사업화 등)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및 제도 보완 필요

3) 기업의 대응방안

● 중국의 혁신 정책 및 기업 변화 모니터링

- 혁신정책이 기존 기반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도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부 분야별·지역별 혁신정책의 변화방향 및 주요 내용 등 파악 필요
- 특히 일부 지역 대상으로 신규 육성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주도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유도·강화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혁신실험이 진행되는 분야, 지역, 기업 등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협력수요 발굴 필요

● 정부간 협력채널 기반의 혁신협력사업 참여

- 혁신분야는 새로운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는 영역으로 혁신기술의 사용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연구 및 사업화 기업간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우므로 정부 및 유관기관을 매개로 한 협력을 활용
- 한·중 기업협력혁신센터,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하의 글로벌 혁신센터 등을 매개로 우리 기업의 기술 및 개발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중국기업을 탐색

● 혁신의 현지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될 것이며, 특히 중국은 다양한 민족, 경제격차, 기후/지리 조건, 산업/인구 구조 등으로 혁신수요 및 선호 등이 다채로움.
-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중국 특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품목을 중국인 선호에 맞추어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영역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신수요에 대응 필요 KIEP